

시론



왕세종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

미국발 금융위기로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국내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가 드디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정부는 '11·3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통해 3조원 규모의 추가 감세와 함께 공기업 투자를 포함, 총 11조원 규모의 재정지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현재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대책으로 사회간접자본(SOC)부문에 5조6000억원의 재정투자를 결정했다. 경기회복의 동인뿐 아니라 경제성장의 동

력이 없는 현재 위기상황을 감안할 때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SOC 투자 확대는 우리 경제의 위기 타개를 위한 긴급 수혈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정책의 방안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도 제기된다. 우선 추가 감세와 함께 재정 지출 확대, 특히 SOC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가 투자 효과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견이다.

분석적 수치만을 두고 본다면 일견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긴급 수혈이 요구되는 현재 위기상황을 감안할 때 교육 및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는 단기적으로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 교육과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는 고용 증가를 바탕으로 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다시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소

인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경제 발자취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기조가 이제는 경제성장 지향의 양적 성장에서 교육을 비롯한 복지수준 향상의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시점에 온 것은 자명하다.

경제규모 측면에서 세계 9위라는 순위에 비해 빈약한 복지 수준은 사실상 '과연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제위기 상황은 무엇보다 경기침체 국면에서 탈피하는 정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경기회복을 견인할 만한 동인이 없고 경제성장의 동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 정책의 기조는 그 어느 때보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기초, 효율적인 자원집행의 정책을 유지할 때다.

더구나 효율적인 자원집행의 정책목표는 단기적으로 침체된 실물경기의 회복과 이를 바탕으로 한 세수 확대 등 추가 자원 마련,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의 구축이 선행된 가운데 복지 수준의 개선을 지향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현 정부는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SOC 투자'가 답이다

처럼 비판적 의견을 내는 측에선 SOC 부문보다 교육 또는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고용 및 소득 창출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논거로서 산업 연관 분석을 활용한 수치가 제시되고 있는데 건설업의 고용 창출 효과는 10억원당 33.5명이고 소득창출 계수는 1.529인 반면 교육은 각각 51.8명과 1.630에 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 방안은 교육과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가 보다 적절하다는

비 증가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발할 때 투자 효과가 분석적 수치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는 경제회복이 본격적인 단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2010년에 이르기까지 경기회복의 근간을 이루는 실물부문에 대한 재정운용 비중을 현저히 높이는데 맞춰져야 한다. 또 재정투자의 효과가 현장에서 바로 실현될 수 있는 SOC부문의 투자확대는 현재 경제상황이 요구하는 최적의 방안